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자본시장 역할과 정책과제 : 토론*

도 건 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본 발표는 저탄소 사회 구축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 분야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녹색금융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자금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고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 진일보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향후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도 발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며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고자 한다.

1. 녹색금융의 범위 설정이 우선될 필요

먼저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하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는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탄소시장 개설 등을 녹색금융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또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차단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 분야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동학술행사(2011. 6. 15(수), 롯데호텔 37층 가네트스위트룸), 「새로운 경제전략 녹색성장 :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단기간 내에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도 녹색금융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며,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녹색금융상품의 범위를 설정하여 실적을 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당국은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자고 독려하지만 현장을 보면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왜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최근 모 금융기관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녹색금융의 실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대중교통 이용, 탄소배출 저감 등 가입자의 친환경 소비활동에 대해 인센티브(포인트)를 부여하는 녹색 신용카드는 주유소 할인이라는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정책의 포커스를 흐리게 하였다.

넓은 의미로는 금융기관의 친환경 활동, 친환경 생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친환경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여신 지원 등을 모두 녹색금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탄소화와 녹색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그리고 분야별로 녹색금융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 후에 각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혜택의 정도를 차별화하여야 보다 효율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2.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

녹색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이 있으므로 간접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출시된 여신 상품들도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의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부실채권이 될 위험이 작고, 적정한 예대마진이 보장되는 곳에 돈을 빌려주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실의 위험이 큰 녹색기술 또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릴 유인이 없게 된다.

그리고 영업점은 물론이고 본점에도 녹색기술 및 산업을 평가할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하다. 현행 여신 시스템 하에서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심사 담당자에게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이나 경영진 차원에서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을 독려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이나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은행이 녹색 분야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고 싶어도 실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시중은행은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60%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의 권한 행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한 분야로의 자금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은행권에서 새로운 녹색금융상품의 출시가 저조하며, 기존의 상품들도 신규 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그린그로스 론’은 2011년 5월말까

지 419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5월 중 신규 대출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제혜택 부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차원에서 우대금리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녹색금융 상품으로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3. 금융당국도 신중한 추진이 필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녹색금융을 추진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시장의 감시자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1년부터 기존 바이오업종 등 성장형 벤처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코스닥 상장특례 범위에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이 포함되었다. 특례를 받으면 설립 경과연수와 경상이익, 자본이익률 등의 기준이 면제되고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이면 상장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에 녹색기업을 표방한 상당수의 상장사들이 퇴출되었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한다.

모범적인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아 장관이 두 차례나 공장을 방문하였던 기업이 2010년 코스닥에서 퇴출된 사례가 있다. 부도덕적인 분식회계에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정부, 거래소, 회계법인, 언론사 등이 모두 속은 것이다. 이 기업에 대해 모 국책은행은 연간 20~30억원 수준이던 신규 대출을 2008년 이후 20배나 늘린 결과 이 기업의 금융권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1,3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4. 녹색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마지막으로 발제에서 정책과제로 제시한 녹색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공기업 형태로 할 경우에는 현재 정책금융공사,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성과평가의 부담, 행정부 감독 및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현재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위험성이 크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간접금융시장보다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투자의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간접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은행)의 역할은 위험의 분산을 통하여 안전하게 예금과 대출을 중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투자는 정책금융기관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녹색전문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들이 수행하기 곤란한 분야의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창업투자회사와 같이 민간 부문에서 설립을 하고, 녹색산업 및 기술 분야의 심사가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부담을 하는 대신 예금이나 안전한 금융자산에 비해 차별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고수익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녹색산업의 자금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녹색산업 투자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녹색성장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 우선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금융상품이 하루빨리 등장하여야 하며, 녹색인증제도의 정착, 녹색산업 투자대상의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